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71호 (2015-03) 발행일 : 2015. 01. 19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최근 빈곤 및 불평등 추이와 시사점*

빈곤 관련 지수들은 2009년을 정점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2013년의 경우 전년대비 소득 빈곤율은 소폭 등락한 것으로, 지출 빈곤율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불평등도(지니계수)의 경우 전년대비 소득 불평등은 개선된 것으로, 지출 불평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2013년 절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1.7%, 경상소득 기준 7.7%, 가처분소득 기준 9.0%로 나타남. 즉,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는 34.2%이며, 여기에 조세·연금기여금·사회보험료 부담을 감안한 경우 빈곤감소 효과는 23.1%임

2013년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미만)은 시장소득 기준 16.7%, 경상소득 기준 14.1%, 가처분소득 기준 13.7%로 나타남. 즉,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는 15.6%이며, 여기에 조세·연금기여금·사회보험료 부담을 감안한 경우 빈곤감소 효과는 18%임

인구 유형별 빈곤율은 노인, 1인가구, 여성가구주가구, 한부모가구 순으로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 집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빈곤완화 정책과 관련 연구들이 요구됨



임완섭
사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1. 들어가는 글

-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 및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동시에 인적자본과 경기변동과도 연관된 복합적인 원인과 특성을 가진 현상이며, 그 정도와 변화는 해당 국가의 사회적 위험수준을 나타냄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효과성에 대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

○ 빈곤과 불평등은 사회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이자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 그리고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접근해야 하는 복합적이 문제임

* 본 원고는 '임완섭·이주미(2014). 2014 빈곤통계 연보'의 내용을 발췌 및 수정함.

-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과 시점에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자료인 빈곤율 등의 통계적 수치는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할 것임
 - 2006년부터 발간되고 있는 『빈곤통계연보』는 주요 지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여건변화에 조응하는, 정책적 판단 및 학술적 용도의 통계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맞춤형 급여제도의 시행을 바로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추이 및 여성가구주가구, 노인, 아동, 한부모 등의 인구유형별 빈곤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공공부조 제도의 방향성 및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통계연보의 특성상 통계지표를 생성하지만 그 해석 및 인과관계는 독자 및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으며, 본 원고에서는 『빈곤통계연보』의 내용중 1인가구를 포함한 전가구를 기준으로 최근의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함

2. 빈곤 및 불평등 추이

가. 분석방법

- 본 연구는 빈곤 및 불평등지수를 산출하는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
 - 『가계동향조사』는 2003년부터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 되었고, 2006년부터 1인 가구가 포함되었음. 여기에 수록된 소득 및 지출 그리고 가구특성 변수들을 통해 전국가구와 도시근로자가구구의 분배 관련 지표들을 생성할 수 있음
 - 2013년까지는 『가계동향조사』에 농어가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부터 농어가 포함된 자료의 활용이 가능해짐. 하지만 본 연구에서 생성한 지표들은 농어를 제외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전국을 대표한 통계치는 아님
- 『빈곤통계연보』에서는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빈곤 및 불평등 지표를 생산하고 있음. 소득에는 시장소득,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이 활용되며 지출에는 가계지출과 소비지출이 활용됨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연금+정부지원금)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조세-사회보장분담금
 - 가계지출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 빈곤율에는 정부발표 최저생계비와 위에 제시된 기준 소득(또는 지출)을 비교하여 구하는 절대빈곤율과 기준 소득(또는 지출) 중위 값의 일정비율을 빈곤선으로 정의하여 구하는 상대적 빈곤율이 있음
 -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빈곤율’은 개인단위의 ‘인구빈곤율’을 의미하며, 인구 유형별 빈곤율의 경우에도 모두 개인단위의 빈곤율임. 지니계수 등의 불평등 지수 역시 개인단위로 산출하였음
 - 불평등 관련 지표로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분위수배율(p90/10, p80/20), 지니계수를 제시

- 5분위배율(상위 20% 점유율/하위 20% 점유율), 10분위배율(상위10% 점유율/하위10% 점유율)
- p90/10(상위10% 소득 · 지출 경계값/하위10% 소득 · 지출 경계값), p90/50(상위10% 소득 · 지출 경계값/중위소득 · 지출 경계값)
- 지니계수는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매우 널리 사용되어지는 지수로 로렌츠 곡선을 활용하여 계산함.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

나.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 절대적 빈곤율

- 전가구(1인가구 포함) 기준 2013년 절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의 경우 11.7%로 전년대비 0.6%p 상승, 경상소득의 경우 7.7%로 전년대비 0.1%p 상승, 가처분소득의 경우 9%로 전년대비 0.1%p 하락함
-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던 절대적 빈곤율은 2013년에는 가처분소득을 제외하고는 전년도보다 상승함(아래 표 · 그림 참조)
-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의 빈곤율 차이는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나타내며 2013년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는 34.2%임. 여기에 경상조세 · 연금기여금 · 사회보험료 부담을 감안한 경우(가처분소득) 빈곤감소 효과는 23.1%임

■ 상대적 빈곤율

- 전가구 기준으로 2013년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의 경우 16.7%로 전년대비 0.4%p 상승, 경상소득의 경우 14.1%로 0.2%p 하락, 가처분소득의 경우 13.7%로 0.3%p 하락하였음
- 최근 3년간 가처분소득 적용 상대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다른 소득과 지출의 경우 소폭 등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아래 표 · 그림 참조)
- 절대적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상대적 빈곤율에서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는 15.6%임. 여기에 경상조세 · 연금기여금 · 사회보험료 부담을 감안한 경우(가처분소득) 빈곤감소 효과는 1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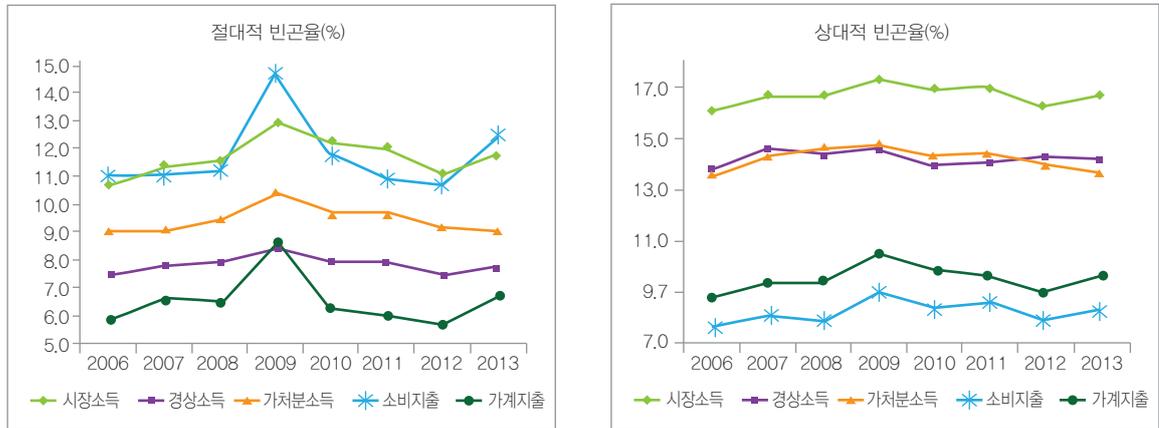
〈표 1〉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2011~2013년) (단위 :%)

구분	적용기준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률(2012년 대비)
절대빈곤율 (정부발표 최저 생계비기준)	시장소득	12.0	11.1	11.7	5.4(0.6%p)
	경상소득	7.8	7.6	7.7	1.3(0.1%p)
	가처분소득	9.6	9.1	9.0	-1.1(-0.1%p)
	소비지출	10.9	10.7	12.4	15.9(1.7%p)
	가계지출	6.0	5.7	6.6	15.8(0.9%p)
중위소득 50%기준 상대빈곤율	시장소득	17.0	16.3	16.7	2.5(0.4%p)
	경상소득	14.1	14.3	14.1	-1.4(-0.2%p)
	가처분소득	14.3	14.0	13.7	-2.1(-0.3%p)
	소비지출	8.6	7.9	8.3	5.1(0.4%p)
	가계지출	9.7	9.1	9.6	5.5(0.5%p)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2006년 이후 빈곤 관련 지수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을 정점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2013년의 경우 전년대비 소득 빈곤율은 소폭 등락한 것으로, 지출 빈곤율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빈곤율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 유형별 빈곤

■ 여성가구주가구 빈곤율

- 여성가구주가구의 2013년 절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적용시 26.1%로 전년대비 1.7%p 상승, 가처분소득 적용시 20.8%로 전년대비 0.6%p 상승함. 한편, 2013년 기준으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절대빈곤율을 비교하면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이 20.3% 낮음
- 중위 50%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적용시 37.2%로 전년대비 1.4%p 상승하였으며, 가처분소득 적용시 32.4%로 전년대비 0.6%p 상승하였음. 한편, 2013년 기준으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상대빈곤율을 비교하면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이 12.9% 낮음

■ 아동 빈곤율

- 아동의 경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적용한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모두 전년대비 하락함. 2013년 절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적용시 5.3%로 전년대비 0.8%p 하락하였으며, 가처분소득의 경우 4.7%로 전년대비 1.2%p 하락하였음
- 상대적 빈곤율(중위 50%기준)은 시장소득 적용시 8.4%로 전년대비 1.1%p 하락, 가처분소득 적용시 7.9%로 전년대비 1.5%p 하락함

■ 노인 빈곤율

- 노인의 경우 2013년 절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적용시 49.1%로 전년대비 2.2%p 상승, 가처분소득의 경우 35.6%로 전년대비 0.8%p 상승하였음. 한편 2013년 기준으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절대빈곤율을 비교하면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이 27.5% 낮음
- 상대적 빈곤율(중위 50%기준)은 시장소득 기준 60.6%로 전년대비 0.6%p 상승, 가처분소득의 경우 전년도 수준을 유지함. 한편 2013년 기준으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상대빈곤율을 비교하면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이 20.8% 낮음

■ 취업자 빈곤율

- 취업자의 경우 2013년 절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적용시 5.4%로 전년대비 0.5%p 상승하였으며, 가처분소득의 경우 전년도 수준을 유지함
- 상대적 빈곤율(중위 50%기준)은 시장소득 적용 9.5%로 전년대비 0.1%p 상승, 가처분소득의 경우 7.8%로 전년대비 0.3%p 하락함

■ 한부모가구의 경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적용한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모두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음

- 한편 2013년 기준으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절대빈곤율을 비교하면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8.7% 낮으며, 상대빈곤율(중위 50%기준)의 경우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2.6% 낮음

■ 1인가구의 경우 절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모두 전년도보다 상승하였으며, 상대적 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의 경우 전년도보다 다소 하락하였지만 시장소득의 경우 다소 상승함

- 한편 2013년 기준으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절대빈곤율을 비교하면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21.5% 낮으며, 상대빈곤율(중위 50%기준)의 경우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12.1%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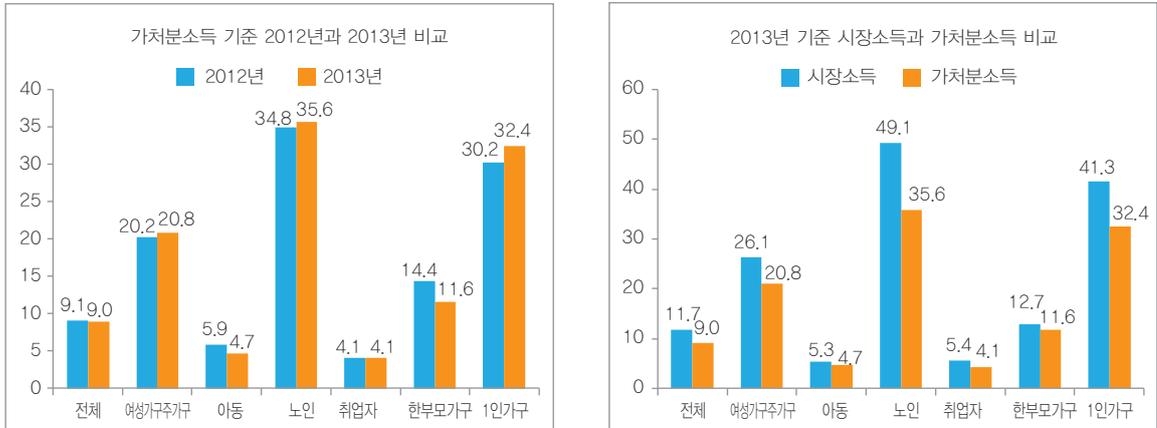
〈표 2〉 인구 유형별 빈곤율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2012년 대비)
여성 가구주 가구	절대적 빈곤율	시장소득	24.4	26.1	7.0(1.7%p)
		가처분소득	20.2	20.8	3.0(0.6%p)
	상대적 빈곤율 (중위50%기준)	시장소득	35.8	37.2	3.9(1.4%p)
		가처분소득	31.8	32.4	1.9(0.6%p)
아동	절대적 빈곤율	시장소득	6.1	5.3	-13.1(-0.8%p)
		가처분소득	5.9	4.7	-20.3(-1.2%p)
	상대적 빈곤율 (중위50%기준)	시장소득	9.5	8.4	-11.6(-1.1%p)
		가처분소득	9.4	7.9	-16.0(-1.5%p)
노인	절대적 빈곤율	시장소득	46.9	49.1	4.7(2.2%p)
		가처분소득	34.8	35.6	2.3(0.8%p)
	상대적 빈곤율 (중위50%기준)	시장소득	60.0	60.6	1.0(0.6%p)
		가처분소득	48.0	48.0	0.0(0.0%p)
취업자	절대적 빈곤율	시장소득	4.9	5.4	10.2(0.5%p)
		가처분소득	4.1	4.1	0.0(0.0%p)
	상대적 빈곤율 (중위50%기준)	시장소득	9.4	9.5	1.1(0.1%p)
		가처분소득	8.1	7.8	-3.7(-0.3%p)
한부모가구	절대적 빈곤율	시장소득	16.3	12.7	-22.1(-3.6%p)
		가처분소득	14.4	11.6	-19.4(-2.8%p)
	상대적 빈곤율 (중위50%기준)	시장소득	23.0	19.0	-17.4(-4.0%p)
		가처분소득	21.7	18.5	-14.7(-3.2%p)
1인가구	절대적 빈곤율	시장소득	37.5	41.3	10.1(3.8%p)
		가처분소득	30.2	32.4	7.3(2.2%p)
	상대적 빈곤율 (중위50%기준)	시장소득	53.5	53.7	0.4(0.2%p)
		가처분소득	48.1	47.2	-1.9(-0.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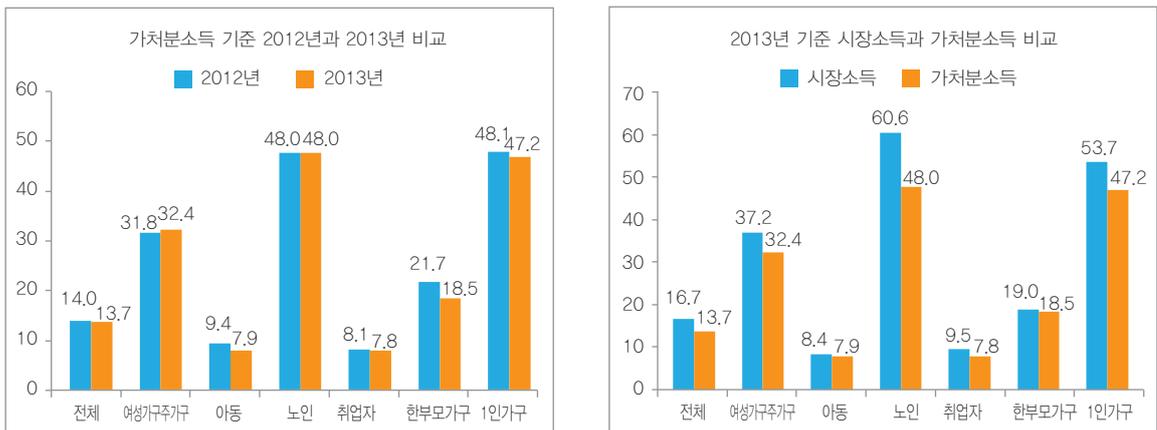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2] 인구유형별 절대적 빈곤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 인구유형별 상대적 빈곤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라. 소득분배

■ 5분위배율 · 10분위배율

○ 2013년 5분위 배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7.0배로 전년대비 0.1배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5.2배로 전년대비 0.1배 포인트 하락하였음

○ 2013년 10분위 배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17.8배로 전년대비 0.7배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9.6배로 전년대비 0.2배 포인트 하락하였음

■ 분위수 배율

○ 2013년 p90/10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5.87배로 전년대비 0.05배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4.47배로 전년대비 0.14배 포인트 하락함

○ 2013년 p80/20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2.70배로 전년대비 0.02배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45배로 전년대비 0.02배 포인트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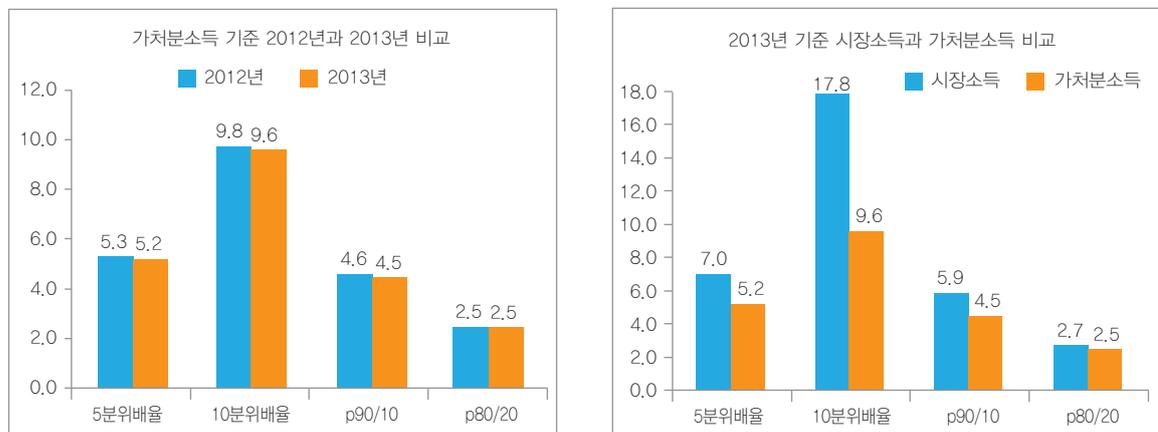
〈표 3〉 소득분배 지표

(단위: 배,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2012년 대비)
5분위 배율	시장소득	6.9	7.0	1.4(0.1배p)
	가처분소득	5.3	5.2	-1.9(-0.1배p)
10분위 배율	시장소득	17.1	17.8	4.1(0.7배p)
	가처분소득	9.8	9.6	-2.0(-0.2배p)
p90/10	시장소득	5.82	5.87	0.9(0.05배p)
	가처분소득	4.61	4.47	-3.0(-0.14배p)
p80/20	시장소득	2.68	2.70	0.7(0.02배p)
	가처분소득	2.47	2.45	-0.8(-0.02배p)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 소득분배 지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지니계수

○ 1인가구를 포함한 전가구 기준 2013년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적용시 0.328로 전년대비 0.001 포인트 하락, 가처분소득 적용시 0.296으로 전년대비 0.004 포인트 하락하였음. 소득 부분의 경우 불평등도가 전년대비 개선된 반면 지출부분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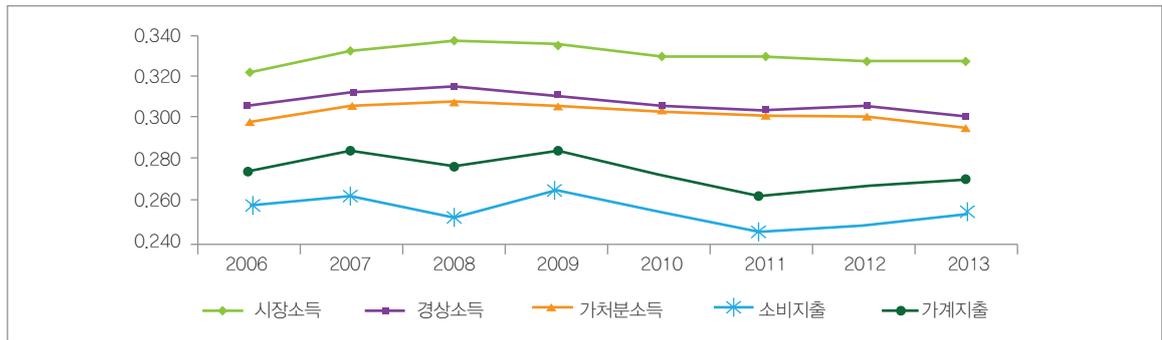
○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면 2013년 기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시장소득 지니계수보다 0.032 포인트 낮음

〈표 4〉 지니계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률(2012년 대비)
시장소득	0.331	0.329	0.328	-0.30(-0.001p)
경상소득	0.304	0.305	0.302	-0.98(-0.003p)
가처분소득	0.302	0.300	0.296	-1.33(-0.004p)
소비지출	0.246	0.249	0.254	2.0(0.005p)
가계지출	0.263	0.267	0.271	1.50(0.004p)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5] 지니계수 변화추이(2006~2013)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결론 및 시사점

- 빈곤율은 2009년을 정점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2013년의 경우 전년대비 소득 빈곤율은 소폭 등락한 것으로, 지출 빈곤율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불평등도(지니계수)의 경우에서도 지출 불평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소득 불평등도는 개선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분배수준의 악화가 2009년을 정점으로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 왔지만, 2013년의 경우 적용되는 소득의 종류와 기준선에 따라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소득부문의 불평등도(지니계수) 개선과 지출부문의 빈곤율과 불평등도(지니계수)의 악화는 저소득층의 소비 위축과 소비 양극화로 인한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2013년을 기준으로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또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의 차이를 보았을 때 공적이전소득이 빈곤완화에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인구 유형별 빈곤율은 노인, 1인가구, 여성가구주가구, 한부모가구 순으로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 집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빈곤완화 정책이 요구됨
- 빈곤 및 불평등 관련 분배지표의 개선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시장소득의 증대와 복지지출 확대를 통한 공적이전 증가 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지표의 수치나 추이는 내적 또는 외적 결정요인에 의해 형성되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분석 또는 각 요소들을 분해하여 그 영향을 밝히는 연구들이 필요함
 - 분배지표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회복을 통한 소득증대와 함께 정부의 소득보장정책을 통한 생활수준의 개선도 매우 중요함. 이러한 정부의 소득보장정책이 소득 및 분배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정확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양질의 분석자료 확보가 필요함
 - 전국을 대표하는 『가계동향조사』 등의 자료를 통해 분배지표를 산출하고 패널자료분석·다층분석 등 정교하고 엄밀한 분석방법 적용이 가능한 패널자료들을 통해 분배지표 관련 인과관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수행된다면, 빈곤 및 불평등의 원인파악과 정부 정책효과성 분석을 통해 풍부한 정책 대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임

집필자 | 임완섭 (사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 044-287-8272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9-007)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 TEL 044)287-8000 | FAX 044)287-8052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